

##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권력의 담론 분석\* 마이클 만의 ‘경제적 권력’을 중심으로

정호근\*\*

본 논문은 마이클 만(Michael Mann)의 IEMP모형을 원용하여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 사회권력의 변화를 ‘주민경제권력(Civil economic power)’을 통한 ‘경제적 권력’의 변화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근대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에서 태동한 ‘주민경제권력(Civil economic power)’은 경제적 권력의 변화와 함께 이념적(I)·정치적(P)·군사적(M) 권력 등 전반적 분야에서 변화를 촉발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에서 현실적인 사회주의로, 수령공동체에서 시장·화폐경제로, 정치권력의 수직적 전체성에서 수평적 분권화로 이행하는 근대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칼 폴라니가 고민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의 도덕적 사회로의 이행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북한이 정상국가로 지속 발전할 것인지, 비정상국가로 변이(變異)될 것인지는 인간의 의식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민주적 장치로 혼종성을 갖춘 IEMP의 이행에 달려 있다.

주제어: 역사사회학, 고난의 행군, IEMP, 주민경제권력, 혼종성, 이행

\*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마이클 만(Michael Mann)<sup>1)</sup>과 필립 아브람즈(Philip Abrams)<sup>2)</sup>로 대표되는 역사사회학은 역사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신현실주의가 국가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역사사회학은 어떻게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특정한 유형의 국가를 만들었는지에 의문을 갖는다.<sup>3)</sup> 이는 그 세력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 권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를 희망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북한은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역사발전 단계에서 중세 봉건제를 넘어 19세기 산업혁명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두 진영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막스 베버(Max Weber)는 천민자본주의를 경계<sup>4)</sup>하였고,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사회주의를 지향<sup>5)</sup>하였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막스 베버,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칼 폴라니 두 사람 모두 어떤 체제든지 인간적인 삶이

- 
- 1) 미국 UCLA의 사회학부 교수 마이클 만은 다양한 국가의 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의 형태들을 IEMP(이념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형태) 모델로 설명했다.
  - 2) 역사학의 무(無)과학성과 사회학의 무(無)역사성을 비판하고 '과정'과 '형성'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태적인 역사사회학의 건설에 의하여 인간과 사회의 양면을 동시적·주체적 파악을 추구했다(1981년 사망).
  - 3) 존 베일리스(John Bayless) 외 편저, 『세계정치론』, 하영선의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7), 288~290쪽.
  - 4) 막스 베버(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서울: 길, 2010), 15~16, 88~89쪽.
  - 5) 칼 폴라니(Karl Polanyi), 『거대한 전환』(서울: 길, 2009), 568~604쪽.

전제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다름 아닌 인간, 사람이 도덕적·윤리적인 지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인간의식의 발달이며, 그것이 발현되도록 투쟁해 나가는 정합의 과정인 것이다. 이에 필립 아브람즈는 인간 자기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역사적 사회구조를 알고 그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알게 할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자원으로 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보다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의 역사와 사회구조를 인간 자신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sup>6)</sup>했다.

1990년대 전후 소련을 비롯해 동구 사회주의가 그 한계를 다하여 체제가 전환될 때 북한 역시 종언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주체사상과 판옵티콘의 주민 감시체제, 그리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앞세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3대 세습에 성공하여 세계정치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령제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내세우며 그 우월성을 과시·유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앞서 막스 베버나 칼 폴라니의 지향과 달리 인민은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으로 체화된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에 가려진 존재였다. 이런 인민을 위해 최소한 굶지 않도록 하는 배급제가 기본인 ‘도덕경제’<sup>7)</sup>도 김정일이 1996년 신년사에서 사상 의지 고양을

---

6) 필립 아브람즈(Philip Abrams), 『역사사회학』, 신용하 외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6쪽.

7) ‘도덕경제’는 생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강제를 통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를 반영한 개념이다. 홍민, 『북한의

위해 주창한 ‘고난의 행군’ 이후 사라졌다. 그러한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시장화의 발달은 북한 사회의 권력 전반에 혼종적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사회적 권력의 원천’을 마이클 만의 IEMP 모델로 설명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적 권력은 어떻게 변형되어 진행되었는지 선행연구와 북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권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사회학적 측면에서 과연 북한 사회는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물론 마이클 만은 시간의 경과가 항상 진화를 동반한다는 진화론적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다.<sup>8)</sup>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1) 역사사회학과 IEMP모델

역사사회학은 역사적 사실을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여 그 유형이나 법칙을 발견하려 하는 연구방법으로, 필립 아브람즈는 사회구조가 ‘시간’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고 규제함과 동시에,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사회구조가 변동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관

---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민영기, 『돈주의 비밀』 중 여섯 번째, 열한 번째; 제임스 스콧(James Scott),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김춘동 옮김(서울: 아카넷, 2004) 등 참조.

8) 서용석, “Michael Mann의 역사사회학”(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5), 186~188쪽.

심이 역사사회학의 요청<sup>9)</sup>이라고 한 바 있다. 그 주체는 인간과 인간이 실제로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화된 사회로 역사 속의 사회, 사회 속의 역사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특이하고, 선형적이 아닌 다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생활이 갖는 우발성 때문에 발생하는 역사의 잡다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sup>10)</sup>는 마이클 만의 역사주의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역사는 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파편·확장되어 가는 사회들의 모습이며, 그러한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비진화(非進化)적이고 다요인(多要因)적이며, 계속적인 형태로 특정 지워지는 것이다.<sup>11)</sup>

역사 속에서 권력은 독재적으로, 민주적으로, 혁명적으로, 혹은 혼합형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권력자 일방의 역사가 아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행위자들의 총체적인 네트워크이며, 그 권력의 재구성, 붕괴, 체제이행도 그 사회 행위자들의 역사적인 사회성인 것이다. 마이클 만이 권력은 “환경의 지배를 통해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sup>12)</sup>으로 언급한 것은 그 사회의 한 개인,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한 권력 쟁취라는 역사적 사실을 사회학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사회구조가 변동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권력과 국가형성은 ① 분배적 권력과 집합적 권력, ② 광범위한 권력과 집중적 권력, ③ 권위적과 확산적 권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조직된다고 마이클 만은 조망하고 있다.<sup>13)</sup>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요소를

---

9) 필립 아브람즈, 『역사사회학』, 5쪽.

10) 서용석, “Michael Mann의 역사사회학,” 182쪽.

11) 위의 글, 188쪽.

12) 위의 글, 183쪽.

13)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ume 3*, 4-5쪽.

<표 1> 마이클 만의 권력의 원천 모델(IEMP)

권력의 종류	특성 및 구조적 수준	사회 권력의 형성
이념적 권력 (Ideological)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며, 美와 종교관습에 참여하려는 인간의 욕구에서 나타남. ⇒ 이념의 통제는 사회적 권력 획득(확산적, 광범위성, 집중적)	
경제적 권력 (Economic)	자연 자원을 추출, 전환, 분배, 소비를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 ⇒ 집중적, 광범위성, 확산적	
군사적 권력 (Military)	군사적 권력은 물리적 힘의 사회적 동원 ⇒ 포괄적 사회 권력 행사(집약적, 광범위성)	
정치적 권력 (Political)	사회관계들의 많은 측면(이념, 경제, 군사 등)을 중앙집중화 및 규제 ⇒ 외부지향성의 국가권력(권위적, 명령적)	

자료: 위 그림은 마이클 만의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ume 3”, 서용석의 “마이클 만의 역사사회학”, 그리고 존 베일리스(John Bayless)·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 편저, 『세계정치론』 등을 토대로 재구성.

결합함으로써 사회 권력의 원천으로 네 가지인 IEMP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IEMP은 역사의 변동 핵심인 권력 행사를 위한 원천(power source)이며, 이를 통제하는 투쟁은 사회발전에 중심을 이루는 사건으로 결국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IEMP’ 모델은 <표 1>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북한은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립무원이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전근대성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사회구조의 변동이 촉발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서두에서 언급한 가설의 당위성 확인을 위해 체제이행에 관한 연구, 고난의 행군에 관한 연구, 기존 상태에 새로운 영역이 가미되는 혼종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 사회 권력(IEMP)의 원천의 변화를 경제적 권력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정치체제 이행에 관한 연구로, 오도넬(Guillermo O’Donnell)과 필립 슈미터(Philippe Schmitter)는 한 정치체제에서 다른 정치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모두 ‘이행’이라고 표현<sup>14)</sup>하였다. 특히 오도넬은 그의 저서에서 민주화 이행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했는데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첫 단계로 보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민주적 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로 보았다.<sup>15)</sup> 즉, 오도넬의 ‘이행’은 근대화 과정이고 진보적인 개념이다. 임경훈은 민주화 이행론이 러시아를 비롯한 탈공산권 지역에 적용은 어렵다는 소비에트 연구가들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소련과 동구권 혁명이라는 체제 변혁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체제이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행위자들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행론의 기본 시각이 타당하다고 하였다.<sup>16)</sup> 최봉대는 북한의 국가기관

---

14) Guillermo O’Donnell/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Vol,4(Baltimore-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6.

15) Guillermo O’Donnell,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J. Samuel Valenzuela(ed.),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p.18.

16) 임경훈, “비교민주화 이행론과 러시아의 탈공산주의 이행,” 『국제정치논총』, 제43권 3호(2003).

과 인민경제부문 공장, 기업소들은 대체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시장 의존관계는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지만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기존 정치적 지배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석한다. 즉, 시장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해도 ‘위로부터 관리되는 방식의 이행’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sup>17)</sup>

고난의 행군과 시장화에 관한 연구로, 박후건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김정일은 ‘선군정치’로 돌파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정일은 위기 돌파에서 가장 큰 문제를 당이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군을 앞세워 바로 잡고 다시 사상을 우위에 놓고 경제건설을 추진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8)</sup> 김갑식은 고난의 행군이 1930년대, 50년대, 90년대 등 3차례가 있었지만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체제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가 몰아친 시기로 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 위기의 원인을 경제난, 자연재해, 미국의 봉쇄정책에서도 찾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객관적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동요와 혁명성 탈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진단했다.<sup>19)</sup> 김용현은 고난의 행군 시기 극심한 체제위기 속에서 군대는 가장 유일한 통제 가능한 조직이라 했다. 조선인민군은 기존의 체제수호를 포함해, 경제건설, 정치사상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면서 체제의 경직성과 군사적 사회질서는 더욱 강화되는 문제점을

---

17)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통권 161호(2014).

18) 박후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는가?”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1호(2018).

19)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2005).

났다고 확인하고 있다.<sup>20)</sup> 김근식은 고난의 행군 이후 형성된 시장화에 대해 김정은과 권력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압도적인 권력과 권능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구조 특히 시장확대를 정권 유지와 특권층에 봉사토록 구조화하고 간섭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sup>21)</sup> 민영기는 북한의 배급제는 1992~1993년경 시·군 배급중단을 시작으로 1995~1996년경 공장 기업소 배급중단으로 완전히 끊기었다고 한다. 집단적 재앙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선의와 공평으로 묶여진 수령공동체는 구성원을 굶주림에서 구해낼 수 없었다고 전한다.<sup>22)</sup> 이우영은 ‘고난의 행군’은 북한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구조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식 문건에 나타나는 고난의 행군은 위기와 고통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제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특징은 윤리가 아닌 물질의 중시, 집단보다 중요한 개인의 대두,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불신, 의식의 퇴행 등이었다고 분석했다.<sup>23)</sup> 정은이는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에서의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시장발달의 동인은 이미 체제 내에 내재되어 있어 북한에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며,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sup>24)</sup> 최용환·김소연은

20) 김용현·한승대, “고난의 행군기’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17권 2호(2016).

21) 김근식,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 권력 관계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2017).

22) 민영기, 『돈주의 비밀: 행군과 시장의 부활』(서울: 지식공유지대, 2020).

23) 이우영,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마음,” 『통일문제연구』, 제28권 1호(2016).

24)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2011).

북한의 시장화 추세는 이제 역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사회통제력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시장이 확산되면서 국가통제에서 벗어난 비공식 부문의 증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권위 약화, 자본주의적 현상의 증가 등 기본체제의 부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sup>25)</sup>

혼종성에 관한 연구로, 닐 로빈슨(Neil Robinson)은 소련의 구체제를 유지했던 합리적 재분배 원리는 시장경제라는 경제적 혼종성의 발현으로 정치적 혼종성 또는 실제 권위주의가 발전하고 견디도록 요구한다고 하였다. 경제 혼종성은 이행이 되기 이전의 정치체제와 얽혀 상호보성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경제적 혼종성은 정치적 관계에 의해 구조화되기 때문에 경제 질서의 한 형태이자 정치질서의 일부로 정착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영역의 상호의존성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정치와 경제의 혼종성에 의한 사생아인 가산제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sup>26)</sup> 박영자·임을출은 쿠바와 북한의 정치·경제를 비교하면서 2015년 현재 북한경제 상황을 ‘탈사회주의’ 현상으로 간주하며 탈사회주의 경제는 ‘혼종’을 드러내며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데이비드 스타크(David Stark)의 말을 인용하여 탈사회주의 현실은 ‘사회주의 붕괴와 자본주의 형성이 동시적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이행’이라는 개념도 꼭 민주화 이행만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sup>27)</sup> 박희진은 북한의 ‘내 집 꾸미기’ 현

---

25) 최용환·김소연,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26) Neil Robinson, “Economic and political hybridity: Patrimonial capitalism in the post-Soviet spher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4(2013).

27)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비교: 정책적 함의』(서울: 통일연구원, 2015).

상을 통해 혼성(混成)화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계층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돈주’라는 역할론에 기반한 자본축적의 개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재계층화 현상의 실체적 존재로서의 계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계층은 시장화 이후 여러 형태로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연결망을 갖춘 사람들이다.<sup>28)</sup>

1990년대 북한은 탈냉전의 세계정세 속에서 국제적 고립과 누적된 체제 모순의 파열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북한의 상황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고난의 행군’이었으며, 붕괴, 몰락, 탈북 등이 뒤따랐다. 고난의 행군은 시장화를 배태하였으며,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의 일시불란했던 사회 권력의 원천과 구조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그것이 이행의 과정이라면 어떤 형태의 이행인지, 그에 따른 사회 권력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혼종성으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와 사회 권력 변동은 어떤 함수관계인지 등 역사사회학 측면의 고찰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앞선 세 가지 측면의 선행연구 검토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체제에 대해 단정적이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북한은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재적 측면의 ‘우리식 사회주의’인지, 또는 ‘강성국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관찰되는 이른바 ‘탈사회주의’인지, 혹은 ‘혼종사회주의’인지 불분명하지만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른바 ‘시장화’는 대표적인 혼종성으로 그 파급효과는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의 모습 발현으로 간주되어, 고난의 행군 이전의 북한 주민은 집단적인 조직(collective organization)으로 분리성이 나타나지 않는 통치의 대상(The object of administration)으로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개념이었다면, 이후는 통치의

---

28) 박희진, “북한 국가건설 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인문학 연구』, 제12권 1호(2020).

대상에서 ‘정치 대상(The object of politics)’으로 점진적인 동학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사회라는 이중구조화<sup>29)</sup> 현상이 창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 이후 3대 세습으로 전체주의적 술탄체제 모습이 역력한 북한 사회주의<sup>30)</sup>는 어떤 모습인지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 3. 북한 사회 권력(IEMP)의 담론

#### 1) 주민경제권력(Civil economic power)<sup>31)</sup>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김일성이 혁명 1세대들과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고난의 행군’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당시 김일성의 행군은 소수 추종세력이었으며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각고의 투쟁을 감수할 수 있었던 반면, 1994년 김일성 사망과 거의 동시에 닥쳐온

29) 배급제의 와해와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는 국가와 시장 간 갈등, 간부와 주민 간 갈등, 엘리트 간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조한범·황선영,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3).

30) 술탄체제에 관한 연구는 최완규,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현대북한연구』, 제4권 1호(2001) 참조.

31) ‘주민경제권력(Civil economic power)’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정권의 도덕적 파산에 따라 각자도생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화의 개별적이 세력인 반면, ‘시장 권력’은 시장화 과정에서 주민 경제가 관료적 지위나 특권층의 정치 자본과 단합·공모를 통해 거대자본으로 권력화된 상부구조임. 즉, 주민경제권력은 고난의 행군 이후 7.1조치와 ‘화폐개혁’의 동인(動因)이며, 시장 권력은 그 이후 정보화와 함께 자본적 속성으로 확대 재편되어 가산제화(patrimonialism)를 비롯해 복잡한 사회적 관계 전반에 연결된 주민경제권력의 총합이다. 필자는 주민경제권력을 마이클 만의 IEMP와 더불어 제5의 사회 권력의 원천으로 인식했다(필자 정리).

‘고난의 행군’은 국가적 재난이었다. 김정일은 안팎의 위기에 대해 1996년 신년사를 통해 사상 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해 ‘고난의 행군’을 주창하였다. 즉 북한은 이 위기의 원인을 경제난, 자연재해, 미국의 봉쇄정책에서도 찾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객관적 위기상황에서 비롯한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동요와 혁명성 탈각<sup>32)</sup>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체제 작동 불능으로 수령공동체인 도덕경제가 무너졌으며, 주민들은 비도덕적 상황으로 내팽겨진 것이다. 배급중단은 자체적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의 시기<sup>33)</sup>였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GDP)성장률과 당시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배급중단 후 주민들의 생존방식’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sup>34)</sup>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령공동체는 이념은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비록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2020년 9월 필자가 접한 고난의 행군 경험 탈북자(여)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타할 것 없지만 배고픔은 또 다른 문제다. 주체사상이 밥 먹여 주진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아무리 고귀한 이념과 도덕이라 하더라도 인간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하루 이틀이 아닌 장기간 헐벗었다. 1996년 10월 김정일은 “당에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데 대한 구호’를 내놓은 것은 모든 간부와 당원, 그리고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휘하였던 수령옹위 정

32)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31~32쪽.

3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검색일: 2020년 11월 22일).

34) 민영기, 『돈주의 비밀』, 22~24쪽. 다수의 탈북자·주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한 것으로 조사된다.

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 극복의 정신,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련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sup>35)</sup>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재앙에 주민들은 김정일의 교시가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했으며, 체제 불신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가는 탈북자를 막을 힘조차 없었다.

‘혼종성(hybridity)’의 사전적 의미는 동식물의 잡종, 혼성체, 혼합물, 혼종 등이다. 서로 다른 두 종이 합쳐져서 새로운 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역사에도 혼종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건축양식, 생활양식, 무덤 형태, 음식, 사상 등 우리의 전통과 외래문화(양식)의 섞임은 혼종 그 자체이다. 이렇게 혼종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존재했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필두로, 탈식민과 시장주의 세계화 시대를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근대를 넘나드는 것이 혼종성이라는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sup>36)</sup>의 견해와 고유환의 분석대로 북한의 사회구성체가 ‘사회주의+자본주의+봉건주의’라면 혼종체제<sup>37)</sup>라 할 수 있다.

피시먼(Fishman), 로슨(Lawson), 이스턴(Easton) 등은 ‘체제’에 대하여 “누가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정치 권력을 가진

35)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36) 칸클리니의 ‘근대를 넘나드는’ 것의 의미는 근대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하는 과정이 혼종화이며, 근대화 과정은 전통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고 재결합하는 경향이다. 이성훈·김창민, “세계화 시대 문화적 혼종성의 가능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9권 2호(2008), 98~99쪽.

37)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집(2019), 25~26쪽.

자들 간에, 그리고 이를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들, 규범들, 규칙들, 의사결정 절차들의 집합”<sup>38)</sup>임을 강조했다. 이는 근대화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형성되는 국가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는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수령-당-국가’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행위자는 관찰이 안 될 뿐 아니라 무의미한 존재였다. 그런 수직적 전체성은 기존 체제·제도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인 시장화라는 혼종성으로 변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까지 평양을 ‘국제도시화’, ‘문화도시화’ ‘혁명도시화’로 만들기 위해 국가 예산을 끌어 모아 평양 시내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 당시 주민들은 1957년에 “식량 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 결정 발표 후 실시된 식량 배급제가 고난의 행군으로 1995년 말 중단되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간 국가 배급제의 붕괴는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를 배태하였고, 이는 사회 권력의 재편을 촉발하는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

그렇게 파생된 시장화는 주민들 각자도생의 최후의 승부처였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혁명정신과 생존을 위한 시장화는 주민을 각자도생의 경제적 행위자로 변모시켰으며, 그 속에서 형성된 ‘주민경제권력’은 자생적 초기와 달리 2000년 이후 시나브로 하게 통치체제 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통치 권력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인식으로 귀결되어 이전과 달리 직간접적으로 국가 정책·이념에 반영되었다. 북한 정권은 1995년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지방 분권의 일

---

38) 이상근,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2017), 62쪽.

환으로 협동농장을 전민 소유제 국영농장으로 전환시키면서 ‘독립채산제’<sup>39)</sup>를 도입·실시한 바 있고, 고난의 행군 이후 2002년 ‘7.1경제개선관리조치’, ‘종합시장제도’, ‘인민생활공채’ 발행이 시장화에 따른 혼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7.1조치’ 이후 시장은 국가 주도의 화폐화·시장화의 길에 들어선다. 이는 국가가 아래로부터 형성된 세계를 승인한 것이다.<sup>40)</sup> 혼종성으로 대표되는 시장화는 현실 영역의 구체적인 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 경제의 변화는 사회 권력(IEMP)의 원천에 대한 변화로 이어졌다.<sup>41)</sup> 시장의 활성화는 당·정·군 권력기관과 그 산하 무역회사들의 개입과 활동, 이해관계를 통해 그 동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sup>42)</sup> 이렇게 주민경제권력은 수직적 통치 권력의 수평적 분권화 경향을 촉진한 동학이고 답론이다. 시장은 주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지배질서를 회입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sup>43)</sup> 특히 시장화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를 이전의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혼종성의 경제구조<sup>44)</sup>로

---

39) 북한은 1960년대 사회주의권 원조가 중단된 이후 군(郡) 단위 ‘자력갱생’과 독립채산제 실시, 그리고 1973년 지방 예산제 도입 등 지방의 경제자립 정책실시,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2005), 317쪽.

40) 차문석,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2007), 37쪽.

41) 최민혁은 탈북자 대상 “장마당을 통해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설문 항목에서 86%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최민혁,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6~127쪽.

42) 홍민,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2009), 93쪽.

43) 민영기, 『돈주의 비밀』, 45쪽.

44) 혼종성의 경제구조에 관한 연구는 김병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시장경제 건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참조.

고착화하였다.

## 2) 경제적 권력의 변화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를 통해 형성된 주민경제권력은 미시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권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고, 1950~60년대 종파 사건 등 권력투쟁에서 만주파가 승리한 후 김일성 중심 유일사상체계의 기반 완성으로 사회 권력은 국가권력이고 곧 수령(최고지도자)의 전유물이었다. 경제 또한 ‘생산의 완전 계획화’, ‘소비의 배급제’, ‘무역의 국가독점’으로 수요와 공급이 시종일관 톱니바퀴처럼 전체주의 시스템의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시기별로 ①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중반을 사회주의적 개조와 암시장의 형성기, ②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을 계획경제의 축소와 시장의 형성기, ③ 1970년대 말~1990년대 초까지를 계획경제의 침식과 시장의 성장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시장은 이미 주민의 필수적인 삶의 공간으로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 즉, 북한의 경제구조는 기존의 계획경제 부문, 군수경제부문, 중앙당경제에 ‘시장부문’이 추가되어 ‘4중구조’로 변화된 것이다.<sup>45)</sup> 이는 현재적 관점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장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나 조직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적 관계망으로, 근본적으로는 자생적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영역으로, 시장의 활성화는 사적 영역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이 등장할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sup>46)</sup>

45)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2011), 261~264쪽.

1980년대는 사회주의권 경제는 점차 기력이 쇠잔해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혼종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마이클 만이 “경제적 권력은 자연 자원을 추출, 전환, 분배, 소비를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한 것은 산업 전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방적인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에 매몰되어 주민들의 소비생활은 오랜 시간 희생되었다. 1984년 김정일의 지시로 경공업 제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합영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1년 12월 ‘나진·선봉’이 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경제에 밀어닥친 안팎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 불능을 초래했다. 고난의 행군은 사회주의 도덕경제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주민들이 가장 먼저 파편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의 국가탈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개인적 영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영역의 시장은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척결의 대상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변화는 시장화였다. 1980년대부터 나름대로 내구력을 갖추고 있던 시장화는 북한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는 화승(火繩)이었다. 시장화를 통한 주민 경제는 북한의 경제적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주민의 자생적이고 역동적인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으로 물가를 형성하고, 화폐로 부를 축적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북한의 사(私)경제가 대두되었다. 사경제는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를 비롯하여 토지 경작, 주택 거래, 개인 운수업 확대, 휴대전화 통신업, 돈주 중심의 금융업 출현 등 전반

---

46) 김성중, “북한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0권 1호 (2020), 86쪽.

적 시장화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sup>47)</sup>

이렇게 확산된 시장은 수많은 미시적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의 증대로 새로운 거시적 사회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교환적 국가-사회관계의 형성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북한은 1998년 8차 개정헌법 경제 관련 분야에서 ‘개인 소유제 확대’를 명시했으며, 2002년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면서 사적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으며, 기업들의 자율권 증대를 명시하였다. 이는 시장의 발달에 의한 현상으로 북한에서 시장은 지속적인 발달을 할 것이며,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sup>49)</sup>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2년 집권 초기 “사회주의 열차에 자본주의를 태우라”라고 강조<sup>50)</sup>했다. 더 나아가 농작물의 자율처분권을 강조하는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sup>51)</sup>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2년 4월 6일 김정은은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당중앙위 간부들에게 “경제사업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각급 당위 위원회들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들

---

47) 이부형, “북한의 사경제화 현황과 시사점,” 18-3(현대경제연구소 VIP리포트, 2018).

48)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평화와 통일』, 창간호(2009), 166쪽.

49)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264쪽.

50)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제244호(2017), 8쪽.

51) ‘6.28 방침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중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며,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에 대한 자율처분권 확대 등이 핵심이다. (통일부 정보포털)(검색일: 2020년 9월 19일).

과 투쟁을 벌리며 내각과 각급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사업의 담당자, 주인이 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sup>52)</sup> 이렇듯 김정일 시기 경제사업 분야에서 당적 통제가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통제로의 전환 움직임 이후, 김정은의 정치 권력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시장화가 경제발전 통치전략과 맞물려 김정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 지원, 내각의 결정·지시 절대복종 등 당적 권한의 수평적 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sup>53)</sup>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위로부터 계획경제’로 유지되던 ‘우리식 사회주의’는 고난의 행군으로 파생된 대표적 혼종성인 시장화로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즉, 주민경제 권력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탱하고 있던 경제적 권력의 이중구조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듯 주민경제권력은 소비재 등 경공업 제품의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수익향상과 그로 인한 잉여를 전유하기 위해 정권의 내각을 비롯한 권력 기관들의 상호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시장 권력으로 이어졌다. ‘시장 권력’은 특정한 어떤 권력체를 지칭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장 이해를 통해 얽혀 있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 전반을 일컫는 개념<sup>54)</sup>이 되었다. 이렇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서 ‘아래로부터’ 형성된 시장화는 주민경제권력을 배태하였고, 이는 국가 독점적인 경제적 권력을 시장·화폐경제라는 혼종경제로의 변화를 상당히 가져왔으며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 등 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었다.

52)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2014), 30쪽.

53) 이와 관련 문헌은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참조.

54)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KDI북한경제리뷰』(2012), 62쪽.

### 3) 경제적 권력 변화의 영향

주지하다시피 변혁과 혁명은 동서고금을 통해 경제적 원인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거대한 전환으로 이어졌다. ‘고난의 행군’은 김정일이 본질적으로는 객관적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동요와 혁명성 탈각으로 바라보고 이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창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은 정권의 최소한인 배급제라는 도덕경제의 실종이었고, 주민들이 굶어 죽는 지경으로 내몰린 것이 더 본질적이었다.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호구지책으로 형성된 시장화는 앞서 나비효과와 같이 경제적 권력뿐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 권력 등 제 분야에 동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북한의 시대 구분은 경제적 권력의 변화의 요체인 주민경제권력이 배태된 ‘고난의 행군’ 전과 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념의 통제는 사회적 권력의 획득이라고 마이클 만은 언급하였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당연히 ‘공산주의(사회주의)도덕’<sup>55)</sup>이라는 이념에 기반한 ‘주체사상’이고 김정일 시기 ‘선군사상’이고, 김정은 시기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이어진다. 북한의 도덕교육은 1964년 김일성의 교시로 ‘공산주의 도덕’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 사회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공산주의 도덕으로 시작된 도덕교육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2004년 김정일 정권에서 사회주의 도덕으로 대체되었으며, 최종 김정은 정권 시기 2013년에 발행된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로 정리되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도덕체제 근간을 흔들었다. 공산주의 도덕이 사회주의 도덕으로 변화하는 과정

---

55) 오기성, “북한의 도덕과 교육 변화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65집(2019).

에서 주요 변수는 소련의 붕괴, 주체사상과 수령, 그리고 고난의 행군에 따른 시장화이다. 주체사상은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등가관계에서 그 위치를 초월했으며, 수령은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능가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한 존재이고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의한 최고의 경지인 것이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를 삭제하게 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김정일이 주창한 ‘고난의 행군’이다. 이는 1998년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될 당시 아사자가 공식적으로 33만여 명<sup>56)</sup>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에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현실 속의 유토피아가 아닌 환상일 뿐이었을 것이다. 2009년 개정헌법에서는 ‘공산주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이상향이 아닌 현실적인 사회주의로 전환한 것이다.

정치적 권력은 그 체제의 이념과 조응하는 경제시스템을 운용하고, 군사력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보호하는 능력으로, 중앙집중화 및 규제라는 속성이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권위적이고 명령적이다. ‘수령-당-국가’ 체제인 북한 사회주의의 국가권력은 바로 수령 또는 최고지도자(사령관)이다. 정치적 권력은 실질적 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이다. 고난의 행군은 국가 구성의 3요소 중 통치의 대상인 인구의 현격한 감소로 통치의 정당성 부재를 초래했다.<sup>57)</sup> 궁핍해진 정권은 백척간두에 있는 체제위기 돌파를 위해 군대를

56) 통계청, 2010년 11월 22일 발표 자료, 비공식으로 300만 이상이라는 설도 있다.

57) 미셸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에 대해 “인구를 주요목표로 설명하고, 정치 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절차·분석·고찰·계속·전술의 총체로 이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방

앞세운 ‘선군정치’에 기댔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북한 인권의 위기는 선군정치의 명분<sup>58)</sup>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는 앞서 언급된 분권화와 함께 정권의 강력한 판옵티콘식의 통제력 약화<sup>59)</sup>는 대민(對民)정치의 변화로 이어진다.

김우영은 1990년대 전후하여 전체주의의 ‘부정적 사회통제’가 후기 전체주의에서는 ‘긍정적 사회통제’로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상통제 측면에서는 ‘강제적’에서 ‘동의적’으로, 생활 통제는 ‘강압적’에서 ‘보상적’으로, 행동 통제는 ‘자의적’에서 ‘법제적’으로 변화했다<sup>60)</sup>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변화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기인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200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를 통해 형법을 전면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강화, 노동단련형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등의 형식적이거나 인권을 의식한 조치를 단행하였다.<sup>61)</sup> 인권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며 정비례 관계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당적 통제 일방의 지방국가기관의 운영 변화가 확인되는데, 이 변화는 중앙권력인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변화에 의한

---

옴김(서울: 난장, 2011), 162~163쪽.

58)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용현·한승대, “고난의 행군기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2호(2016);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제8권 1호, 『현대북한연구』(2005) 등 참조

59) 최민혁,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 123쪽.

60) 김우영,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51쪽.

61) 김종육, “북한의 정치변화와 주민의 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 인권 토론회 자료집』(2007), 22쪽.

것이 아니라, 각급 지방과 주민들의 생존전략 결과이며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sup>62)</sup> 즉,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주민이라는 행위자는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통치의 대상이었다면, 이후에는 정치의 대상으로 점진적인 동학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상의 결과인 것이다. 앞서 1990년대 이후를 ‘후기전체주의’라고 하고, 또 전향적인 법률 개정도 경제적 권력의 이중구조화 이행의 현상이라면, 북한의 정치적 권력이 수직 일방적인 전체성에서 수평 다양성과 분권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권력 또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2000년 10월 5일 『로동신문』은 고난의 행군에 대해 “우리 당이 50년 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왔지만 최근 시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때는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다. 1993년 NPT 탈퇴로 불거지기 시작한 1차 핵 위기는 고난의 행군과 함께 북한 체제를 포수가 노리는 전깃줄 위의 참새와 같은 형국으로 만들었으며, 유훈 통치 기간 중 김정일은 사상적·정치적 돌파를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제기<sup>63)</sup>하였다. 즉, 국가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 자원 추출과 동원을 위해 의지할 곳은 ‘군대’였다. 이는 곧 ‘선군정치’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1997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임꾼들과 한 담화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우리는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sup>64)</sup>라고 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 당의 대중통

---

62)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2005), 318쪽.

63)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32쪽.

64)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255쪽.

제력이 약화되고 노동계급의 혁명성이 저하된 데 따른 군사적 사회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다.<sup>65)</sup> 북한은 1998년 8차 개정헌법에서 선군정치에 따른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 2004년 4월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지금 사회의 기관, 기업소들과 다른 무력기관들이 저마금 수산기지와 외화벌이기지를 꾸려놓고 비법적인 장사행위를 하면서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민군대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없앨 것은 없애고 넘겨받을 것은 넘겨받아 인민군대에 소속시켜 놓아야 합니다.”<sup>66)</sup>라고 할 정도로 김정일의 시장화 확산 속에서 통치 기반은 선군정치였다.

#### 4. 나가며: 북한 사회 권력의 전망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는 전통적으로 ‘국가-시민사회의 이중구조’를 허락하지 않는 특징<sup>67)</sup>이 있다. 고난의 행군 속에서 도시로 확장된 장마당은 시장화를 형성하였으며 북한 체제의 이중구조 흐름의 시발이 되는 ‘주민경제권력’을 태동했다. 이는 마이클 만이 구성하는 4대 사회 권력 외 IEMP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5의 권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은 ‘경제’라는 개념상의 영역을 넘어서는 권력

65) 서보혁,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서울: 책세상, 2003), 139쪽.

66) 한기범, “북한 정책 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2000~2009)”(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72쪽.

67) 김근식,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 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2017), 171쪽.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함축<sup>68)</sup>하고 있다. 이는 주민경제권력이 실제적 행위자로서의 존재론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며, ‘고난의 행군’의 역설인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형성되어 북한의 경제적 권력을 비롯하여 제 분야의 변화로 이어지는 근대적<sup>69)</sup> 경향을 가져온 것이다. 시장화는 대표적인 혼종성의 기제로 북한 체제에서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의 이행을 가져오는 조용한 울림으로 국가와 구성원이 상하좌우로 정합하면서 형성되는 구성체의 동학인 것이다.

문제는 그 이행의 지향점이 어디냐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구체적이고 영역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수요·공급에 의해 전국적인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환율도 동일하게 적용<sup>70)</sup>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비중이 더욱 커져갔다. 시장경제는 어느 나라든 규제, 통제, 감시체제에 있듯이 북한 역시 김정일 시기 2002년 시장 기능을 부분 인정하는 ‘7.1 조치’ 이후 김정은 시기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점차 국가 주도의 시장화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북한은 2018년 경제특구 투자유치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 단결되어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안정되고 공고한 사회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sup>71)</sup>라는 체제선언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OECD는

---

68) 홍민, “북한의 국가와 시장 관계,” 77쪽.

69) 브라이언 터너(Brian Turner), 『막스 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최우영 옮김(서울: 백산서당, 2005), 33쪽.

70)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 관련하여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201』(2007), 84~85쪽;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2014-738(KIET산업연구원, 2014) 등 참조.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4~5쪽.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2000년 이후 국제 제재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배경으로, 분권화와 함께 국가, 당, 군 통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시장 활동의 규모와 폭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sup>72)</sup>고 분석했다. 위의 두 문장으로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기형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세대가 북한 사회의 주축이 되고, 기성세대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EMP와 주민경제권력의 체제 내 네트워크는 지속될 것이다.

위와 같이 마이클 만의 IEMP 모델을 활용하여 살펴본 북한의 통치 권력은 도덕체계, 경제체제, 권력 운용, 사법제도 등 제 분야에서 ‘주민경제권력’이라는 환경과의 정합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역동적으로 재편되어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 통치 권력이 미래의 역사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의 보다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주체사상·감시체제·선군정치 등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체화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2018년 3월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 우리 측 대북 특사단에게 “미국은 우리를 정상국가(normal state)로 대우해야 한다”<sup>73)</sup>라고 했다. 북한이 정상국가<sup>74)</sup>로 이행할지, 그렇지 않은 비정상국가로 변이(變異)될 것인지는

---

72) Vincent KOEN·Jinwoan BEOM, “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ECO/WKP(2020)15(OECD, 2020), p.3.

73) 동아닷컴, 2018년 3월 8일.

74) 정상국가란 대내적으로는 열린사회의 원리 작동, 이데올로기적인 성분과 계급 차별 철폐, 국내의 자유 왕래, 대외적으로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 등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국가를 지칭한다. “김정은, 미 향해 “정상국가 대우해달라,” 동아닷컴, 2018년 3월 8일; “정상국가는 열린 사회에서 가능하다,” DAILYNK, 2019년 5월 6일.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주의 도덕’, ‘사회주의 문명국’ 등의 정치적 구호와 세뇌가 아닌 인간의 의식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민주적 장치로 혼종성을 갖춘 IEMP의 이행에 달려 있다.

■ 접수: 10월 26일 / 수정: 11월 28일 / 채택: 12월 8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 2) 신문

『로동신문』, 2000년 10월 5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베버, 막스(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서울: 길, 2010).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토르망 옮김(서울: 난장, 2011).

민영기, 『돈주의 비밀』(서울: 지식공유지대, 2020).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비교: 정책적 함의』(서울: 통일연구원, 2015).

터너, 브라이언(Bryan Turner), 『막스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최우영 옮김(서울: 백산서당, 2005).

서보혁,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서울: 책세상, 2003).

조한범·황선영,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서울: 통일연구원, 2013).

베일리스, 존(John Bayless)·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 편저,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2007).

폴라니, 칼(Karl Polanyi),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서울: 도서출판 길, 2009).

아브람즈, 필립(Philip Abrams), 『역사사회학』, 신용하 외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 2) 논문

-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제11집(2019), 5~32쪽.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2014), 29~64쪽.
- \_\_\_\_\_,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2005), 9~38쪽.
- 김근식,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 권력 관계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2017), 167~194쪽.
- 김성중, “북한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0권 1호(2020), 65~92쪽.
- 김종욱, “북한의 정치 변화와 주민의 생활: 김정일체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2007), 3~27쪽.
-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43~83쪽.
-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2005), 303~32쪽.
- 박희진, “북한 국가건설 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12권 1호(2020), 151~184쪽.
- 박후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는가?,”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1호(2018), 227~254쪽.
- 이상근,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 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 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2017), 53~98쪽.
- 이우영,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마음,” 『통일문제연구』, 제28권 1호(2016), 173~203쪽.
- 서용석, “Michael Mann의 역사사회학”(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5), 182~190쪽.
- 오기성, “북한의 도덕과 교육 변화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65집(2019), 147~185쪽.
- 이부형, “북한의 사경제화 현황과 시사점,” 18-3(현대경제연구소 VIP리포트, 2018).
- 임경훈, “비교 민주화 이행론과 러시아의 탈공산주의 이행,” 『국제정치논총』, 제

43권 3호(2003), 477~494쪽.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제 244호(2017), 1~17쪽.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평화와 통일』, 창간호 (2009), 141~170쪽.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54권(2011), 220~283쪽.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수령을 대체한 화폐,” 『답론201』(2007), 77~121쪽.

\_\_\_\_\_,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 자료집』(2007), 31~60쪽.

최민혁,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04쪽.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통권 161호(2014), 161~195쪽.

최용환·김소연,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7~52쪽.

최완규,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현대북한연구』, 제4권 1호(2001), 9~45쪽.

한기범, “북한 정책 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2000~2009)”(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43쪽.

\_\_\_\_\_,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KDI북한경제리뷰』, 2012-1호 (2012), 47~62쪽.

### 3) 기타

동아닷컴, 2018년 3월 8일.

통일부 정보포털, [unikorea.go.kr](http://unikorea.go.kr)(검색일: 2020년 9월 19일).

통계청, [kostat.go.kr](http://kostat.go.kr), 2010년 11월 22일 발표 자료.

DAILYNK, 2019년 5월 6일.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Mann, Michael,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ume 3, Global Empires and Revolution, 1890~1945*(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O'Donnell, Guillermo,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ed.)(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Vol.4(Baltimore-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2) 논문

KOEN, Vincent and Jinwoan BEOM, "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ECO/WKP(2020)15(OECD, 2020), pp. 1~47.

Robinson, Neil, "Economic and political hybridity: Patrimonial capitalism in the post-Soviet spher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4, No.2(2013), pp.136~145.

## A Discourse Analysis of Power in North Korea after the ‘Arduous March’: Revolving around Michael Mann’s ‘Economic Power’ Model

Jung, Ho Kyun(Dongguk University)

By using Michael Mann’s IEMP model,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North Korean social power after the “arduous march” period, centering on the change in “economic power” through “civil economic power.” After the ‘arduous march’ period in which the naked face of the modernity was clearly expressed, citizens’ economic power, which was born out of the ensuing marketization, triggered changes in ideological (I), economic (E), military (M), and political (P) power. Thi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a modern transformation toward horizontal decentralization in the vertical integrity of the political power — from communism to pragmatic socialism, the Suryong-masses system to a market and monetary economy, to military social order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is a transition of human free consciousness to a moral society that Karl Polanyi contemplated. The continued hybrid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rduous march” generation will further strengthen the virtuous cycle of IEMP and civilian economic power. Whether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develop into a normal state or transform itself into an abnormal state depend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EMP, which is a hybrid of democratic devices in which human consciousness can be freely expressed.

Keywords: historical sociology, arduous march, IEMP model, civil economic power, hybridity, implementation